

Vol. 7

2023.07. 14.

Customs & Trade News

HANJOO CERTIFIED CUSTOMS AGENCY



HANJOO

T. 02-2017-2117

F. 02-545-1682

W. <http://www.hjcustoms.co.kr>

통관사업1본부 안만복본부장 mbahn@hjcustoms.co.kr

통관사업2본부 박주경본부장 jpark@hjcustoms.co.kr

통관사업3본부 장진명본부장 jmjang@hjcustoms.co.kr

통관사업1본부 이재욱전임 jwlee@hjcustoms.co.kr

CONTENTS

I. 법령 개정사항

II. 입안 예고

III. 조세심판사례

IV. 관세 및 FTA관련 동향

I. 법령 개정사항

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 개정

(1) 개정 이유

축산물 수입업소도 해외작업장의 위생 상태를 스스로 점검하고 수입하는 경우에는 우수수입업소로 등록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소비자가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해외식품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어 국내 반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원료·성분 등을 지정·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식품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유통단계의 행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출입·검사·수거를 거부하거나 회수 명령 등을 위반한 영업자에게 등록취소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우수수입업소 등록 대상 확대 (제7조 제1항 및 제4항)	현재는 축산물 관련 해외작업장을 제외한 해외제조업소에서 식품을 수입하는 자만을 우수수입업소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축산물 도축 등을 하는 해외작업장에서 축산물 등을 수입하는 자도 우수수입업소로 등록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수입검사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영업부담을 완화함.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의 지정 (제25조의3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소비자가 인터넷 구매대행업자를 통하여 구매하거나 직접 구매하는 해외식품 등에 사용된 원료·성분 중 국내로의 반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원료·성분 등을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함.
출입·검사·수거 거부 등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 마련 (제29조 제1항 제6호의2 등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식품 등의 위해방지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출입·검사·수거를 거부하거나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축산물 위생 관리법」에 따른 회수 명령을 위반한 영업자 등에게 등록취소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3) 시행일

‘23.06.11.

I. 법령 개정사항

2.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1) 개정 이유

소비자가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해외식품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국내 반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원료·성분 등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수입식품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유통단계 행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회수 명령 등을 위반한 영업자에게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내 반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원료·성분의 지정 및 지정해제의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회수조치나 회수계획보고 등을 이행하지 않거나 압류·폐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우수수입업소의 제품뿐만 아니라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도 계획수입 신속통관 대상에 추가하고, 제품명이 같지 않더라도 제조국·해외제조업소 등이 같으면 동일사 동일수입식품으로 보아 정밀검사 등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의 지정 및 지정해제의 기준 정비 (제44조의3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5조의3 제1항에 따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원료 등이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등의 기준과 규격이 고시되거나 인정된 원료·성분 등 일정한 경우 지정을 해제할 수 있음.
심의회위원회 구성 (제44조의4 신설)	법 제25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의 지정 및 지정해제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회위원회를 두며, 심의회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함.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의 지정 및 지정해제 절차 정비 (제44조의5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5조의3에 따라 원료·성분 중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을 지정하거나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며, 국민건강에 급박하게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의결 전에 미리 국내 반입차단 조치를 할 수 있음.

(3) 시행일

’23.06.11.

I. 법령 개정사항

3.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1) 개정 이유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연구개발 지원에 대한 사항을 명확화 하는 한편,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감염병과 관련하여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예방접종을 받은 근로자에 대한 유급휴가 관련 사항 신설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감염병 연구개발 지원 (제8조의6)	1)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연구개발 기획 및 치료제·백신등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개발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2) 감염병 치료제·백신 개발 관련 연구기관·대학 및 기업 등의 의뢰를 받아 감염병 치료제·백신 개발에 관한 시험·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함.
근로자의 예방접종 유급휴가 조항 신설 (제32조의2)	사업주는 예방접종을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시·도지사의 역학 조사 필요서류 제출 요구 조항 신설 (제18조의4, 제79조 의2)	시·도지사는 감염병과 관련하여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하며, 자료제출 요구를 받고 이를 거부·방해·회피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하거나 또는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한 자에 대한 처벌조항을 규정함.

(3) 시행일

'23.06.08.

II. 입안예고

1. 「관세법 시행규칙」 입안계획

(1) 입안 이유

기업의 연구개발 촉진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감면할 수 있는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에 고속기류건조기, 복합사이클 부식시험기, 소규모 생물배양기 등을 추가하고, 종전의 감면 대상이었던 냉각기, 포집기, 이온밀링기 등은 제외하여 총 46개 품목에 대해 관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법 제9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 추가 및 제외	제3902.90호, 제3908.90호, 제8419.39호, 제8419.89호, 제8421.29호, 제8422.40호, 제8424.89호 등 46개의 품목이 지정되었음

(3) 의견수렴기간

'23.07.19.

II. 입안예고

2.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입안계획

(1) 입안 이유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축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동물성 식품에 대한 수입위생평가를 도입하고, 소비자의 안전한 해외식품 구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검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9471호, 2023.06.13. 공포·시행)됨에 따라 수입위생평가 대상이 되는 동물성 식품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검사 및 실태조사를 전문성 있는 기관에 위탁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동물성 식품의 범위 (안 제1조의2)	동물성 식품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기타 식육 및 기타 알제품, 식육함유 가공품, 알함유 가공품을 말함.
실태 조사의 정보 제공 요청 등 (안 제6조의2)	법 제25조의5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수입신고한 자료,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체에 관한 자료 등을 의미함.
수출식품 등 안전성 지원을 위한 방법 (안 제13조의3)	제38조 제3항 제3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수출식품 등 부적합 발생에 따라 외국 정부가 요청한 원인조사 및 개선 사항 등에 대한 안전관리 지원, 외국정부에 수출업소등을 새로 등록하거나 이미 등록된 수출업소등의 등록 유지를 위한 지원 등을 의미함.
권한 및 업무의 위 임·위탁 추가 (안 제14조 제1항의 제15호의2 및 제15 호의3)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출업소 등 위생관리 지원 및 기술지도, 부적합 원인조사 및 개선 사항 등에 대한 안전관리 지원과 현지실사 대응지원 업무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함.

(3) 의견수렴기간

’23.07.23.

II. 입안예고

3.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입안계획

(1) 입안 이유

빠르게 증가하는 식품 등의 수입에 효과적 대응을 위해 국민 건강에 미치는 위해 우려가 낮고 반복 수입되는 수입식품 등의 경우 신고서 접수부터 수리에 이르는 과정을 자동화 시스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정하고, 신고대행업자가 전자상거래 형태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시설기준 완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수입식품등의 신고 수리 자동화 대상 및 절차 개정 (안 제29조의2)	자동화된 방식으로 신고를 수리할 수 있는 대상은 최초 수입된 수입식품, 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필요한 조건을 붙이는 수입식품 등에 해당하지 않은 수입식품 등을 말함. 또한, 수입신고를 받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자동화된 방식으로 검사하며 결과가 적합한 경우 수입신고자에게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함.

(3) 의견수렴기간

'23.07.24.

II. 입안예고

4.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입안계획

(1) 입안 이유

소량으로 수입되는 희귀의약품의 검체 보관 의무를 개선하고 멸종 위기에 놓인 야생 동·식물의 수입 허가증명서 유효기간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국가출하승인 제도 운영 개선 (안 제64조, 제65조, 제66조, 별지 제60호 서식)	긴급한 공급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가출하승인 시료를 업체가 직접 채취하여 식약처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물량을 격리 보관할 수 있도록 하며, 시료의 양과 처리기간, 검정항목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공고하도록 함.
희귀의약품 검체 보관 관리 의무 개선 (안 별표6의2 제7.1호 카목 신설)	소량으로 수입되는 희귀의약품의 검체 보관 의무를 개선하여 생산국 또는 원 제조원에서 희귀의약품의 검체를 보관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갖출 경우 식별을 위한 검체만 보관할 수 있도록 함.
CITES 의약품 수입 허가 유효기간 연장 (안 제59호 서식)	CITES 의약품 수입허가서의 유효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여 국제조화하도록 서식을 개정함.

(3) 의견수렴기간

'23.08.21.

Ⅲ. 조세심판사례

1. 쟁점물품(저주파 마사지기)을 마사지용 기기로 보아 HSK 제 9019.10-2000 호와 그 밖의 전기기기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1) 주요내용

가. 청구법인은 2017.5.19.부터 2019.4.10.까지 000에 소재한 000(이하 “쟁점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저주파 마사지기(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수입신고번호 000호 등 000건으로 쟁점물품을 ‘마사지용 기기’로 보아 관세. 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제9019.10-2000호, WTO 협정관세율 0%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2.5.16. 및 2022.7.8. 쟁점물품이 HSK 제8543.70-2090호 (기본관세율 8%)의 ‘그 밖의 전기기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000과 같이 관세 000원, 부가가치세 000원, 가산세 000 합계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8.8. 및 2022.9.28.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결정요지

쟁점물품은 1Hz~1,000Hz의 저주파의 전기적 전류를 신체에 붙인 전극패드를 통해 피부내부의 근육층에 직접 흘려보내 근육을 자극하는 EMS 원리의 기기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고유한 기능을 가진 제85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는 전기기기로 HSK 제8543.70-2090호로 분류함에 타당함

(3) 결정일

2023.05.10. (조심 2022 관 0136)

Ⅲ. 조세심판사례

2.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입항전수입신고를 하였다가 이후 개별소비세율 인하를 이유로 당초 입항전수입신고의 취하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

(1) 주요내용

가. 청구법인은 2022.7.28. GS 000로부터 액화천연가스(NATURE GAS,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수입신고번호 000으로 쟁점물품을 「관세법」 제244조에 따른 입항전수입신고(이하 “쟁점수입신고”라 한다)하였고, 처분청은 2022.7.28.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2.8.1. 처분청에 ‘오류 신고’ 사유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취하 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수입신고 취하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2022.8.1. 이를 거부(이를 “쟁점①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한편, 청구법인은 2022.8.24.쟁점수입신고와 관련하여 납부한 개별소비세 000원, 부가가치세 000원, 합계 000원을 과다 납부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8.29. 이를 거부(이를 “쟁점②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8.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결정요지

쟁점물품에 대한 입항전수입신고 전에 이미 입법예고에 따라 개별소비세 인하를 미리 공표하였으나 청구법인 스스로 신속한 통관을 위하여 입항전수입신고를 선택하였으므로 이후 낮은 개별소비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수입신고수리 취하신청을 한 것은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움

(3) 결정일

2023.05.10. (조심 2022 관 0146)

IV. 관세 및 FTA 관련 동향

1. 전략물자 관리제도 길라잡이 발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전략물자 관리제도에 대한 기업의 이해를 제고하고, 수출통제 규범 미준수로 예상하지 못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전략물자 관리제도 길라잡이」를 발간하였다.

「전략물자 관리제도 길라잡이」는 전략물자 판정 및 수출허가, 전략물자 자율 준수제도, 미국 수출관리규정(EAR), 대(對)러 수출통제 등 그간 기업 수출현장에서 주로 제기된 분야를 중심으로 자주 묻는 질의답변(FAQ) 90건과 생생한 현장 사례 102건에 관한 내용을 담고있다.

「전략물자 관리제도 길라잡이」 발간은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 정세 급변과 첨단기술의 이중용도 사용 등으로 각국의 수출통제 조치가 대폭 확산되는 상황에서, 수출통제 규범의 이해와 리스크 대응이 기업의 수출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부상함에 따라 이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또한, “전략물자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yestrade.go.kr) 알림/정보마당 공지사항”에서 상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전략물자 관리제도 길라잡이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IV. 관세 및 FTA 관련 동향

2. 관세청, 한-아세안 합동 마약단속작전 제안

윤태식 관세청장은 6.7 화상회의로 개최된 제19차 한-아세안 관세청장회의에 참석하여 아세안 10개국 관세당국 대표들과 한국-아세안 관세당국 간 관세분야 주요 협력사안들을 논의했다.

양측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마약 등 세계 무역환경이 그 어느 때 보다 엄중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면서 마약 등 국경 간 범죄대응 협력, 관세분야 신기술 개발 협력, 전자상거래 등을 논의했다.

한국측은 한-아세안 합동 마약단속 작전 및 관세청 자체 연구개발을 통한 관세분야 신기술 개발동향에 대해 발표하였고, 아세안측은 아세안 차원의 관세분야 중점추진 사업 및 아세안의 능력배양사업 우선순위에 대해 발표하였다.

마약단속 작전 관련하여서는 현재 아세안 국가 간에 운영 중인 마약, 총기류 등 위험교환시스템인 “정보통지시스템(ANS)”에 한국이 신규 참여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었으며, 능력배양사업 관련하여서는 개도국 능력배양 프로그램 등을 통해 아세안과 능력배양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었다.

제19차 화상회의를 통해 한국측과 아세안측은 관세분야에 있어서 상호 주요 협력파트너임을 재확인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상호 협력할 계획임을 밝혔다.

IV. 관세 및 FTA 관련 동향

3. 23년 하반기 발전연료·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운용방안

정부는 23.6.30 종료 예정인 발전연료 (액화천연가스(LNG),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조치를 발전연료 가격 상승 부담 등을 고려하여 현행과 같은 수준으로 23.7.1부터 23.12.31까지 6개월 연장하였다.

< 발전연료 개별소비세율 인하 현황 >									
(단위: 원/kg)									
구 분		당초		현행 (탄력)	구 분		당초		현행 (탄력)
		기본	탄력				기본	탄력	
액화 천연 가스 (LNG)	발전용 LNG (일반)	12	12	10.2	유연탄	고열량탄 (5,500kcal~)	46	49	41.6
	발전용 LNG (열병합)	12	8.4	8.4		중열량탄 (5,000~5,500kcal)		46	39.1
	비(非)발전용 LNG	60	42	42		저열량탄 (~5,000kcal)		43	36.5

이번 조치는 최근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발전원가 부담 누적에 따른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여건 및 공공요금 인상 압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것으로, 이를 통해 발전원가 부담 누적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 압력을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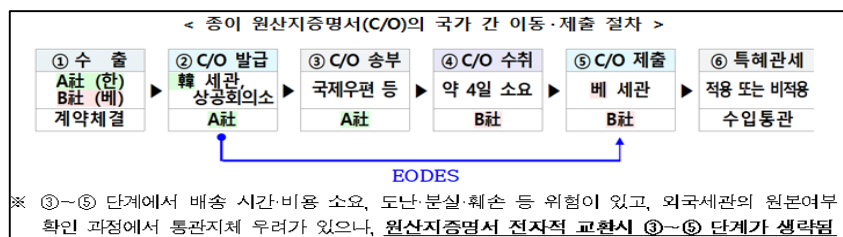
IV. 관세 및 FTA 관련 동향

4. 한-베 자유무역협정 활용시 '종이'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윤태식 관세청장과 응우옌 반 토(Nguyen Van Tho) 베트남 관세총국(GDVC, General Department of Viet Nam Customs) 부총국장은 베트남 하노이 관세총국 본부에서 고위급 양자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윤태식 관세청장 취임 이후 한-베트남 관세당국간 첫 고위급 공식 만남이며, 이번 회의를 통해 양국 관세당국은 한-베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EODES) 개통식을 개최하는 한편, 마약 단속 협력 강화,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상호인정약정(MRA) 체결 협력, 통관애로 해소 협력채널 신설 등을 논의했다.

특히, 23.7.15부터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원산지정보가 전자적으로 실시간 교환되면 우리 수출기업은 베트남에서 한-베/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더 이상 '종이'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 수출입기업은 물류비용 절감, 종이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진위 여부 확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관애로 예방 등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V. 관세 및 FTA 관련 동향

5. 한일 수출규제 현안, 4년 만에 완전히 해소

2019년 7월 이후 지속되어 온 한일 수출규제 현안이 4년 만에 완전히 해소되었다.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를 일본 수출무역 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그룹 A, 속칭 화이트리스트)에 추가하는 개정안을 각의에서 의결하였다. 일본의 개정안은 7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우리나라가 일본 화이트리스트에 재지정되면,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전략물자 수출 시 “일반포괄허가”가 가능해짐으로써 신청 자격과 요건이 완화되는 등 양국 기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일본 화이트리스트 재지정 기대 효과 >	
이 전	이 후
<input type="checkbox"/> 일반포괄허가 불가 특별일반포괄허가만 가능(CP기업) <input type="checkbox"/> 캐치올통제 대상	<input type="checkbox"/> 일반포괄허가 가능 (CP기업 아닌 일반기업도 포괄허가○) <input type="checkbox"/> 캐치올통제 적용 X
* CP 기업 : 일정 수준 이상의 수출관리를 이행한다고 인정받아 자격을 얻은 기업 * 캐치올통제 : 수출통제 대상(전략물자)이 아닌 품목의 경우에도 대량살상무기 등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수출 허가를 받고 수출해야 하는 제도	

또한, 산업부는 수출통제 분야 양국 간 신뢰가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평가하면서 향후에도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양자 및 다자 수출통제 현안 관련 일본과의 협력을 긴밀히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IV. 관세 및 FTA 관련 동향

6.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완구 등 65개 제품 리콜명령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은 여름철을 맞이하여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물놀이용품, 냉방용품 등 1,088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조사 결과, 유해 화학물질, 제품 내구성, 감전 위험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65개 제품이 적발되었으며, 국표원은 관련 사업자들에 대해 리콜명령(제품의수거, 파기, 수리, 교환, 환불, 개선조치 등)을 내렸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야외활동이 많은 여름철에는 특별히 안전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제품 구매 시 반드시 KC마크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국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위해제품의 시중유통 차단 노력을 지속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